

수도권 자치단체간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

이김 보 현*·최 화 식**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분석
- IV. 공공서비스와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Tiebout의 가설을 수도권 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와 주거지 이동에 적용
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9-2000년의 수도권
자치단체의 2차 자료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로 지
환경과 교육환경, 후생환경, 재정지출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영향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향해 주거지를
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 가설을 지지한다. 따라서 수도권 분산, 신도시 개발 등
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후생·주거·교육·행정·재정력)을 함께 고
전략이 요구된다.

□ 주제어 : 지역간 이동, 지방공공서비스(지방공공재)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I.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행정활동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중요한 과제이다.¹⁾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자신들의 요구패턴을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자치단체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Tiebout에 의해 제시된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one's feet)'로 잘 설명된다. 일반적인 경제인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의 선정에 있어서도 소비자-투표자는 지역주민으로서 책임져야 할 재정무담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 창출되는 편익을 비교하여 가장 큰 효용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여 이주할 것이라는 가정이다(Tiebout, 1956: 416-424).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발에 의한 투표모형(이하 'Tiebout 모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미국가들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미흡하였다. 과거 한국의 인구이동은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개발과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이들 도시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매력에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과거 주거지 이동에 관한 연구의 관심도 도-농간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거지 이동패턴은 원거리(도-농간) 이동보다 근거리 즉, 인근자치단체로의 이동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현재, 인구 5명당 1명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며, 서울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의 약 66%가 가까운 경기도의 시·군으로 이동하여 인근의 자치단체 간 주거지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²⁾

인근의 자치단체간 주거지 이동은 주변에 많은 수의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에 차이가 있을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세원의 공정한 배분, 정치적 책임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용이한 접근 등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다(조일홍, 1993: 354).

2) 2001년의 한국 인구이동은 지속적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현상(주로 충남·전남·전북·강원 등에서 서울·경기·인천 등으로 많이 이동 함)과 인근 자치단체 간 이동현상(서울의 경우 강남구·동작구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은평구·서대문구에서 경기도 파주시로, 중랑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이 활발하였다(통계청, 2002; 려화식, 2002: 2-3).

은 이러한 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시킨다. 광역단체의 자치구 및 경기도의 시·군 등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행정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획일적인 조세제도 하에 있지만 자치단체 별 세원이나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에 있는 자치단체간의 주거지 이동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향유하려는 주민의 선호가 반영된 결정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생활환경이 더 쾌적하거나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다양성 면에서 더 양호하다면 더 높은 인구의 유입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도권 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의 차이와 지역 간 주거지 이동의 관계를 검증한다. 즉, 지방공공서비스가 수도권 자치단체간 주거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인구이동은 특정의 출발지(origin)로부터 특정의 목적지(destination)로의 영구적 내지 반영구적인 주거지의 변경을 의미한다(유경문, 1980: 10). 여기에는 지역 간의 이동이 포함되며, 이동행위는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이동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mobility) 또는 이주(migration)는 그 기간에 따라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으로 구분된다. 장기적(long-run) 이동은 제도적 갈등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정치적 이유에서 나타나는 세대에 걸친 이동이며, 단기적(short-run) 이동은 계절적 요인(휴가를 위한 이동)이나 일상적인 출퇴근 또는 출장을 위한 짧은 기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중기적(middle-run) 이동은 한 가구가 현재의 지역에서 다른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서 지역 간(interregional) 이동³⁾이라고 한다(Isard, 1975: 172-181).

본 연구에서의 '인구이동' 또는 '주거지 이동'이라 함은 위의 유형 중에서 중기적 이동으로서의 '지역 간 이동'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3) 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의 이동은 국가 간(inter-national) 이동, 지역 간(inter-regional) 이동, 그리고 지역 내(intra-regional)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 중에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오늘날 인구이동의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이은우, 1993: 62).

지역으로 옮겨 거주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지역'은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특정의 지역을 중심으로 타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를 전입(in-migration)이라 하고, 타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를 전출(out-migration)이라 한다. 그리고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를 순 이동인구(net-migration)라 하며, 이를 해당 지역의 전체인구로 나눈 비율을 순 인구이동률(net-migration rate)이라고 한다.

2.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

지역 간의 주거지 이동은 의사결정자의 자발적인 결정 즉,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이는 소비자-투표자(consumer-voters: 이하 '지역주민'이라고 함)의 현 거주지에 대한 상대적 만족감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게 된다. 다양한 후보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상되는 비용과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들 중에서 편익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지역으로 주거지 이동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현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요소나 다른 지역에서 기대되는 편익요소는 주거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지역 간 주거지 이동은 개인의 자유롭고(free) 합리적(rational)인 의사결정 행위로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요인은 현 거주지 또는 이주 대상지역의 지역특성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며, 미시적 요인은 이주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이다(정기원, 1989: 31-37). 이하에서의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시적 요인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거지 이동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는 거리와 방향에 따른 공간적 측면을 강조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동은 두 지역의 거리와 인구사이에 힘과 질량의 법칙이 작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의 인구크기와 직접 관계가 있으며 거리에 반비례한다. 전통적 중력모형에 경제적 요인을 추가시켜 경제적 중력모형으로 확장하였다. Lowry(1966)는 "인구이동은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실업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직업을 찾을 것이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중력모형을 구체화하였다.

이동과 관련한 또 다른 전통적 모형은 출발지에서 밀어내는 힘(배출요인)과 목적지에서

끌어당기는 힘(흡입요인), 또는 이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 배출-흡입모형(push-pull model)이다. 모든 출발지와 목적지는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잡아 두고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하는 긍정적인 힘 또는 흡인요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지역으로부터 사람을 유출하는 부정적인 힘 또는 배출요인들을 갖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이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유경문, 1989: 16 재인용).⁴⁾

인구이동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들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동은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닌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 요인에 의한 주거지의 이동보다 생활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의한 주거지 이동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중요성이 증명되었다.⁵⁾

주거지 이동에 미치는 생활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정책적 요인 또는 공공재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조세부담, 행정서비스 수준, 교육기회, 주택건설 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을 포괄하는 요인이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이동과의 관계는 지방정부 내의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에 의한 이동과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적 요인에 의한 이동이 있다. 전자는 한국과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거지 이동의 형태이며, 후자는 미국과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주거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과 비교의 형태로 고려되었다.⁶⁾

정책적 요인에 의한 주거지 이동을 연구한 구미국가들의 연구는 지방정부의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관심을 둔 재정적 인구이동(fiscal migration)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Tiebout는 일반적 주장에 충실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정책과 이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 4)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임금수준, 더 많은 고용기회, 보다 좋은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은 흡입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반대로 높은 실업률, 경제적 침체 및 차별대우, 열악한 편의 시설 및 문화시설 등은 배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5) Graves(1976), Schachter and Althaus(1982), 유경문(1989), 경기개발연구원(1999) 등은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지역의 쾌적성, 교육, 치안 및 각종 공공서비스와 같은 생활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6) 한국처럼 지방세율이 같다는 조건 하에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각종 생활환경이 쾌적하거나 제공되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질과 다양성 면에서 더 양호한 경우, 또는 미국처럼 지역마다 지방세의 종류나 세율이 다른 조건 하에 어떤 지역이 질과 다양성 면에서 동등한 생활환경과 지방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지방세로 제공하는 경우, 아니면 어떤 지역이 보다 양호한 생활환경과 지방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지방세로 제공하는 경우 인구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송명규, 1992: 29).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노동시장의 특성과 조세제도 및 복지혜택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의 특성과 관련된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는 잠재된 소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그 지역으로의 전입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Chshing, 1993; Knapp & White, 1992).

한편, 지방정부의 조세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출이 증가하고, 교육 등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전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Herzog & Schlottmann, 1986).

지역의 재정구조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세원이 많을수록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구조가 건전할수록 전출은 적게 하고, 전입을 많이 한다. 지역의 조세수입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상품세가 높을수록 전입과 전출을 억제하는 반면 재산세는 전입, 전출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는 전출을 유도하고 전입을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세출과 공원 및 휴양시설에 대한 세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출과 전입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과 소방부문에 대한 세출이 많을수록 전입과 전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복지부문에 대한 세출은 전출을 유도하고 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Fox · Herzog · Schlottmann, 1989).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하여⁷⁾ Graves(1976)는 지역의 쾌적도가 경제적인 요인보다 대도시의 인구이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reenwood (1985)는 지역의 쾌적도보다는 임금이나 고용기회와 같은 요인이 인구이동에 더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요인으로 범죄발생비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범죄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ushing, 1993; Knapp &, 1992; Lee., 1997).⁸⁾

지역 간 주거지 이동에 관한 국내의 문헌들에 나타난 결과를 고찰하면, 주거지 이동은 후

7) 지역의 환경적 특성은 기후와 지역의 쾌적성(Amenities)에 관련된 요인들로서 한국의 경우 지역 간 기후차이가 거의 없지만, 미국은 지역에 다른 다양한 기후로 인해 개인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 결정의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8) 미국에서의 지역 간 주거지 이동은 조세와 복지제도의 유인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주(州)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따라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흑인 또는 유색인종 또는 소외계층 등과 같은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며 더 많은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편익이 더 높은 지역으로 유인되는 반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백인)들은 복지혜택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Cebula & Belton, 1994).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백인들의 재정부담과 재분배적 조세제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생복지환경이 좋을수록 정(+)¹의 관계가 있으며, 후생복지환경과 주거지 이동과의 관계는 후생복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 인구의 유입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동은 주택보급률이 높을수록 정(+)¹의 관계가 있다. 주택사정과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다. 후생복지환경과 주택사정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후생복지환경은 지역 내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 등이 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명규, 1992; 경기개발연구원, 1999), 주택환경은 주택보급률과 주택수 증가율 등이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문, 1989; 경기개발연구원, 1999).

또한 주거지 이동은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정(+)¹의 관계가 있다. 교육환경과 주거지 이동은 교육의 질이나 교육기회가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지역이 더 높은 인구유입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류성호·이성우, 2000; 이은우, 1996; 전진석, 1998; 유경문, 1989 등). 그리고 이동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양호할수록 정(+)¹의 관계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은 지역 내 공공관서가 많을수록 또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은 것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이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일·최 순, 1989).

3. 분석모형

과거 한국 인구변화의 주요 특성은 경제발전 기간에 나타난 빠른 도시화의 속도가 도시인구의 절대적 증가로 나타났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 특히, 몇몇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인구이동 현상에 대한 연구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원인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구이동은 원거리 지역보다는 대도시권 내 또는 인근지역 간의 이동이 빈번하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의 주거지 이동 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내의 인구이동 현상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동으로 가정한다. 즉, 특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양호하면 그 지역으로의 순 이동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공공서비스 수준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으면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를 더 유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와 주거지 이동의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의 자치단체간 인구이동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NMR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e$$

NMR	: 순 인구이동률
a	: 상수
b _i	: 회귀계수
X ₁	: 자치단체의 후생환경
X ₂	: 자치단체의 주거환경
X ₃	: 자치단체의 교육환경
X ₄	: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X ₅	: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X ₆	: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e	: 오차

위의 모형은 한국의 인구이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지방공공서비스의 차이에서 오는 이동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인구 이동 변수(순이동률)를 결과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공공서비스 관련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생환경(지방자치단체의 후생시설 수, 공원당 주민 수, 사회복지시설 수 등), 주거환경(주택보급률, 지역간 접근성 등), 교육환경(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그리고 대학진학률 등), 행정서비스 접근성(공공관서 수, 관공서당 주민수,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등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미국가들에서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재정적 이동(fiscal migration)이다. 즉, 지방정부의 지방세제도와 후생복지비 지출(특정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증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근본 모델로 하는 Tiebout가설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내의 지방재정변수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Tiebout의 주장이 한국과 같은 지방재정제도 하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재정변화는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 재정부담능력(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재정지출능력(사회개발비 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첫째, 지방공공서비스에 한정하여 지방공공서비스 유형을 후생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 개개의 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모형들(주로 지역의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과 차별화 하였으며, 둘째, 지방공공서비스에 지방재정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의 현실에서 Tiebout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Ⅲ.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분석

1. 조사설계

1) 가설 및 조작화

지방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주거지이동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지방공공서비스 관련변수를 후생환경, 주택환경, 교육환경,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방재정 변수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후생환경은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관련되며(박문옥, 1990: 161), 지역 내 더 많은 후생시설이 있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지역 내의 공원은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공원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많을 수록 혜택이 감소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여성·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이미지를 해칠 우려에 의해 기피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생환경과 관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 후생복지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 공원 개소 당 주민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1-3 : 사회복지시설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둘째, 주택은 공공재적 요소와 사적재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주거지 이동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주택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지역 내 주택환경은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i & Brown, 1980). 현재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이동 현상도 주택문제와 관련한 요인들이 많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주택환경에 관한 대표적인 측정지표는 지역의 주택보급률이다. 그리고 주거지의 결정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교육 및 출퇴근)을 위한 교통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진다(송명규, 1992). 따라서 지역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이다.

가설 2-2 : 지역간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교육환경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많다(Jud, 1984; Jud & Bennett, 1986; Frey, 1980; Jud & Watts, 1981; 성진근, 1988; 송명규, 1992 등).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의 질적 차이가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주거지 결정에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많으면 작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대학진학률이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높으면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고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며, 대학진학률이 높으면 인구의 유입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3-1 :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 가설 3-2 :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 가설 3-3 : 대학진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표 1〉 변수 및 조직적 정의

변 수		변수의 측정	조직 근거
회 면 면 수	인구이동 (NMR)	· 순 인구이동 률(%) ¹⁾	Cebula & Belton(1994) 등
	후생환경 (X ₁)	· 후생시설 수(개소) ²⁾ · 후생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 공원 1개소당 주민수(명) ³⁾ - 사회복지시설 수(개소) ⁴⁾	이종수(1995) 송명규(1992) 유경문(1989) Li & Brown(1980)
	주거환경 (X ₂)	· 주택 보급률(%) ⁵⁾ · 지역간 접근성 ⁶⁾	유경문(1989), 송명규(1992)
	교육환경 (X ₃)	· 교사 1인당 학생 수(명) ⁷⁾ · 학급당 학생 수(명) ⁷⁾ · 대학진학률(%) ⁸⁾	Jud & Bennett(1986) 송명규(1992)
행정서비스 접근성 (X ₄)	· 공공관서 수(개소) ⁹⁾ · 공공관서 당 주민 수(명) ¹⁰⁾ · 공무원 당 주민 수(명) ¹¹⁾	Fox, et. al.(1989) Schachter & Althaus(1982) 유경문(1989)	

(계 속)

변수		변수의 측정	조작 근거
독 립 변 수	행정서비스 접근성(X_4)	· 공공관서 수(개소) ¹⁰ · 공공관서 당 주민 수(명) ¹⁰ · 공무원 당 주민 수(명) ¹¹	Fox, et. al.(1989) Schachter & Althaus(1982) 유경문(1989)
	재정부담(X_5) 재정능력(X_6)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백만 원) ¹² · 주민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액(백만 원) ¹³ · 재정자립도(%) ¹⁴	Cebula & Belton(1994) 등

- 1) 해당자치단체의 순 이동인구(전출-전입)를 총인구수로 나눈 값
- 2)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기타 후생시설 등과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의 부설 복지시설, 각종의 운동장, 체육관 등과 도서관,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국공립극장·공연장, 시·구민회관, 각종 기념관 등 국공립 시설 및 이에 준하는 공공시설만을 포함(2000년).
- 3) 해당 자치단체의 총 인구수를 근린공원 수로 나눔(2000년)
- 4) 지역 내의 아동·노인·여성·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기타의 복지시설 등을 포함(2000년)
- 5) 해당 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2000년)
- 6) 지역간 접근성은 해당 자치단체와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 대중교통 노선 수(2000년)
- 7)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역 내 고등학교(인문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그리고 실업계 고교를 포함) 전체 학생 수를 교사수로 나눔,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내 총 학생 수를 학급수로 나눔(2000년).
- 8) 해당 자치단체의 국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의 인문계 졸업자 중 대학진학자 비율(2000년)
- 9) 해당자치단체의 행정관서, 지·파출소, 소방관서 수를 포함(2000년)
- 10) 공공기관 1개당 주민 수는 해당자치단체의 전체 주민 수를 지역 내 공공기관 수로 나눔(2000년)
- 11)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해당자치단체의 전체 주민 수를 공무원 총수로 나눔(2000년)
- 12) 해당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2000년)
- 13) 해당자치단체의 사회개발비 지출총액을 총 인구수로 나눔(2000년)
- 14)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00년)

넷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된다. 지역내의 공공기관은 행정관서와 지·파출소 그리고 소방서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 내의 관공서들은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따라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실증분석에서도 주민이동의 주요요인으로 검증되었다(Fox, et. al., 1989; Schachter & Althaus, 1982; 유경문, 1989).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관서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또는 공공관서당 주민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1 : 공공관서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 지역 내 공공기관 당 주민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4-3 :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감소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재정변수는 일부 연구들에서 지방정부의 정책변수로서 인구이동의 결정모형에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 재정변수는 인구이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며, Tiebout의 주거지 이동이론의 전제이다. 즉 지방세부담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기피할 것이며, 반면 복지혜택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주는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6-1 :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6-2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측정지표들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었던 도구들로서 각각의 변수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모형과 개개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분석 대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였다.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주민들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여주는 지역으로 이주 하는 선택과정을 통해 선호를 표출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특정의 지역 내에 다수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즉, 선택할 수 있는 수 많은 지역사회가 존재할 경우 활발해 진다(Tiebout, 1956).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면 주민은 기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가정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다.

자료의 모집대상은 수도권의 66개 자치단체(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 인천광역시: 8

개 자치구와 2개 군, 경기도: 23개시와 8개 군)로서, 자료는 해당 자치단체 및 상급기관에서 발행한 2차 자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각 년도 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도권 66개 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2개 시(안성시, 평택시)와 5개 군(연천군, 포천군,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그리고 인천의 2개 군(옹진군, 강화군)은 거리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는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단순선형회귀분석으로 개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개개의 가설검증은 10%의 유의수준($\alpha = 0.1$)의 범위 내에서 유의수준과 예측되는 회귀계수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거시적 요인들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분석모형에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공공서비스와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1. 표본자료의 특성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도권 내 5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에서 얻은 연구와 관련 있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최화식, 2002: 참조). 2년의 기간 동안 수도권의 순 인구이동률은 평균 0.0185%로 나타나 기간 내 순 이동인구가 증가하였다. 순 인구이동 자수를 보면, 1999-2000년의 순 인구이동자 수는 평균 4,175명이 증가하였으며, 인구이동이 수도권 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순 인구이동자 수의 합이 0이 됨을 가정할 때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후생시설은 단체 당 평균 약437개이

9) 수도권의 인구변화는 서울지역의 감소와 인천 및 경기지역의 증가현상이 뚜렷하다. 2000년의 경우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인구감소현상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감소 9개 지역, 증가 22개 지역이었으며, 인천은 감소 6개 지역, 증가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2001). 이처럼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주로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최소 34개에서 최대 1292개까지 자치단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더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이 16개(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이며, 경기도는 9개(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용인시 등), 인천은 4개 구(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수도권의 총 공원수는 3217개소이며, 평균 1개의 자치단체 당 약 56.44개소 정도이다. 자치단체의 총 인구수를 지역내의 공원수로 나눈 공원 1개소 당 주민 수는 평균 약 9,131명이며, 최소 2,656명에서 최대 47,026명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편 수도권의 사회복지 시설은 총 243개소이며, 인천의 남동구는 하나도 없는 반면, 부평구가 11개소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평균 82.1%이며, 최소 52.2%에서부터 최고 116.6%까지의 분산을 이루고 있다. 2000년 현재 서울의 경우 5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수도권 평균 주택보급률보다 낮으며, 경기도는 3개 지역만이 수도권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도봉구, 노원구, 아포구, 강서구, 강남구 등이며, 경기도에서 수도권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성남시, 안산시, 하남시 등이다.

수도권 고교생의 교육의 질을 나타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996년 24.6명에서 1998년 23.1명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20.3명으로 교육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도권 내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서울은 25개 구 중 13개 구(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금천 등)가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반면, 경기도는 31개 지역 중 11개 지역(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파천, 구리, 남양주, 의왕, 용인시 등)이다.

대학진학률을 보면, 수도권 전체 대학진학률은 약 73.81%로 비교적 높은 진학률을 보인다. 그리고 최소 38.41%(경기도 화성군), 최대 100%(경기도 김포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수도권의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이며, 서울의 경우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송파구 등 7개 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률이 서울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현상이며, 서초구(67.50%), 강남구(68.29%)의 경우도 수도권 전체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표본자료의 일반적 특성

변수		표본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소 값	최대 값
인구	순이동율	57	0.01853	0.06828	1,05595	-0.08696	0.25070
	순이동수		4175	20368	237978	-24371	70022
후생 환경	후생시설 수	57	437.21	279.36	24921	34.00	1292.00
	공원당 주민수		9131.00	7677.00	520453	2656.00	47026.00
	사회복지시설 수		4.26	3.07	243	0.00	11.00
주거 환경	주택보급률	57	82.09	15.47	4679.00	52.20	116.60
	지역간 접근성		8.93	6.14	509.00	2.00	31.00
교육 환경	교사당 학생수	57	20.34	2.13	1159	14.18	24.58
	학급당 학생수		42.22	3.36	2406	30.96	48.02
	대학진학률		73.81	11.12	4207	38.41	100.0
행정	공공관서 수	57	105.12	48.75	5992	36.00	285.00
	관공서 당주민수		4754.00	2032.00	270995	1143.00	10921.00
	공무원 당주민수		339.43	134.34	19347	119.07	702.75
지방 재정	1인당지방세부담	57	0.43	0.54	24.56	0.03	3.70
	1인당 사회개발비		0.22	0.14	12.64	0.08	0.75
	재정자립도		57.20	19.19	3261.00	29.50	95.30

지역내의 공공기관(행정관서, 소방관서, 지·파출소) 수는 자치단체 당 평균 105.12개소이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한 공공관서 1개소 당 주민 수는 2000년 현재 약 4,754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서초 등이며, 경기도는 수원, 동두천, 고양, 파천, 구리, 오산,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김포, 화성, 광주, 양주 등이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등이 낮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을 지역주민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0년 수도권 평균 약 43만원으로, 3만원(인천 남구)에서 3백7십만 원(서울 중구)의 편차를 보인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등이며, 인천은 중구만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수도권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액은 평균 22만원이며, 최소 지출지역은 인천 계양구(약 8만원)이며, 최고 지출지역은 경기 파천(약 73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중구만 유일하게 수도권 평균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도권 평균은 넘어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천은 중구와 동구에서 수도권 평균보다 높게 지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7.2%이다. 재정자립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는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구 등 전체 25개 자치구 중 6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평택, 동두천, 오산, 하남, 파주, 인천을 제외한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높다. 인천의 경우는 모든 자치구들이 수도권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과 인천보다는 경기도의 재정이 더 건실하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위의 기초통계로 볼 때,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준 및 혜택은 서울보다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서울 인구의 감소와 인천과 경기 인구의 증가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단순선형회귀분석

〈표 3〉은 지방공공서비스와 순 인구이동률간의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회귀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순 인구이동률(NMR)을 종속변수로 하고 후생환경(X_1), 주거환경(X_2), 교육환경(X_3), 공공행정 서비스(X_4), 지방재정요인(X_5, X_6) 등의 거시적 독립요인들과 2-3개의 하위변수들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을 중심으로 회귀계수를 설명한다.

첫째, 후생환경(X_1)의 하위변수로서 후생시설 수는 10%의 유의수준($\alpha=0.1$)에서 유효하게 나타난다. 후생시설은 순 인구이동률과 정(+)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내의 후생시설 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기타 후생시설 등과 각종의 운동장, 체육관 등과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미술관, 음악관, 박

물관, 국립극장·공연장, 시·구민회관, 각종 기념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이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역내의 공원수가 많을 수록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반대로 공원 1개소 당 이용주민이 많을 수록 혜택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한 공원 1개소 당 주민수가 순 인구이동률이 미치는 영향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10%의 유의수준($\alpha=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지역내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은 인구의 유출이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기타의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들이 많을수록 지역의 이미지와 주거환경을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져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수와 순 인구이동률과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10%의 유의수준($\alpha=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X_2)은 주택보급률이 정(+)의 회귀계수 값으로 1%의 유의수준($\alpha=0.01$)에서 의미 있게 해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접근성과 순 인구이동률은 정(+)의 관계가 있으며, 1%의 유의수준($\alpha=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3〉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순 인구 이동률(NMR)						
요 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
		계수	표준화 계 수			
후생 환경	후생시설 수	0.000059 *	0.23935 *	0.000032	1.83	0.0729
	공원개소 당 주민 수	-0.00000204 *	-0.22978 *	0.00000117	-1.75	0.0855
	사회복지시설 수	-0.00000014 *	-0.23219 *	0.00000008	-1.69	0.0976
주거 환경	주택보급률	0.00272 ***	0.61637 ***	0.00046868	5.80	<.0001
	지역간 접근성	0.00400 ***	0.35959 ***	0.00140	2.86	0.0060

(계 속)

교육 환경	교사1인당학생 수	-0.01402 ***	-0.43774 ***	0.00388	-3.61	0.0007
	학급당 학생 수	-0.00731 ***	-0.36006 ***	0.00255	-2.86	0.0059
	대학진학률	0.00018842	0.08486	0.00029832	0.63	0.5303
공공 행정	공공관서 수	0.00001696	0.00019	0.00018886	0.09	0.9288
	관공서 당 주민 수	-0.00000907 **	-0.26982 **	0.00000436	-2.08	0.0424
	공무원1인당국민 수	-0.00007819	-0.15383	0.00006772	-1.15	0.2532
지방 재정	1인당지방세부담	-0.00000056	-0.12164	0.00000060	-0.91	0.3674
	1인당사회개발비지출	0.16362 **	0.32962 **	0.06319	2.59	0.0123
	재정자립도	0.00095907 **	0.26949 **	0.00046212	2.08	0.0426

*** : $P < 0.01$ ** : $P < 0.05$ * : $P < 0.1$

셋째, 교육환경(X3)은 인구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환경을 측정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인구가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1%의 유의수준($\alpha = 0.01$)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또한 인구가동과 부(-)의 관계에서 5%의 유의수준($\alpha = 0.05$)에서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그 수가 작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기대한다. 즉,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많으면 학생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학급당 학생 수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인구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유출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위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높은 지역이 순 이동인구가 증가하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지역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게 해석되지 않아 대학진학률과 순 인구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행정서비스 접근성(X4)과 순 인구가동은 관공서 당 주민 수가 5%의 유의수준($\alpha = 0.05$)에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 관공서 당 주민 수는 순 인구가동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즉, 공공관서 1개가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어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감소되고 유출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관서에는 행정관서와 소방관서, 그리고 지·파출소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단순한 공공관서 수와 순 인구가동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되지 않았다.

다섯째, 지방재정적 요인 중 재정부담(X5)과 순 인구가동은 주거지 이동에 관한 연구의

주요 관심분야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은 구미국가들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관심 밖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중앙정부에 의해 조세정책에 대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흡하여 인구이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서 다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인구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재정능력(X6)과 순 이동간의 관계에서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액은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5% ($\alpha=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되었다. 따라서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이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의 후생복지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서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순 인구이동은 정(+)의 관계이며, 5% ($\alpha=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보면, 주택보급률이 0.61637로서 가장 높으며, 교사1인당 학생 수(-0.43774), 지역 간 접근성(0.35959), 학급당 학생 수(-0.36006),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액(0.32962)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후생시설 수, 공원 당 주민 수, 사회복지시설 수, 관공서 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등은 약 0.22-0.27정도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이러한 변수들이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서비스 관련 요인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다중회귀분석

단순선행회귀분석에 기초하여 위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각 요인별 대표적 변수를 대입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여러 지방공공서비스들이 함께 주거지 이동에 고려되어질 때,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각 요인별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고 단순회귀분석에서 나타난 무효가 기대한 무효와 일치하는 요인들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후생환경은 후생시설 수(X1)를, 주거환경은 주택보급률(X2)을, 교육환경은 교사 1인당 학생 수(X3)를, 행정서비스 접근성은 관공서 당 주민 수(X4)를, 그리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X5)과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액(X6)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NMR} = & -0.08256 + 0.0000029 \cdot X_1 + 0.00251 \cdot X_2 - 0.00720 \cdot X_3 - 0.0000055 \cdot X_4 \\ & (-0.75) \quad (1.76) \quad (4.00) \quad (-1.74) \quad (-0.97) \\ & -0.01705 \cdot X_5 + 0.34270 \cdot X_6 \\ & (-1.09) \quad (0.41) \end{aligned}$$

$$R^2 = 0.4317, \quad \text{Adj } R^2 = 0.3636, \quad F \text{ 값} = 6.33, \quad \text{Pr} > F = 0.0001$$

* ()는 t-값을 나타냄.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F-검증)은 1%의 유의수준($\alpha=0.01$)에서 유의하며, 모형의 설명력(R^2)은 43.17%이다.¹⁰⁾ 분석결과 모든 계수의 방향은 예측한 방향과 같이 나타났다. 변수별로 보면, 첫째, 후생시설의 수(X_1)와 인구이동(NMR)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와는 달리,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 질 때는 그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주택사정을 대표하는 주택보급률(X_2)과 인구이동 또한 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가 더 높으며, 이러한 추론은 분석결과에 의해 5%의 유의수준($\alpha=0.05$)에서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주거지 이동은 주택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환경을 대표한 교사 1인당 학생 수(X_3)는 인구이동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타 지역으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환경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들(학급당 학생 수, 대학진학률 등)에서도 교육은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의 주거지 결정은 자녀교육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넷째, 공공서비스 접근성(X_4)과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X_5) 등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석되었지만, 다른 공공서비스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질 때는 의미가 약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회귀분석

10) 다중회귀모형의 적합성에 있어서 등분산성과 정규성 검증을 하였다. DW통계량이 1.964로 무(無)자기상관 기준인 2에 가깝게 나타나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의 검증에서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최대 3.4155로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만으로 볼 때,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질 때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주거지 이동과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가설검증

위에서 본 단순선형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회귀계수로서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가설의 검증의 계수의 방향과 가설의 방향이 일치하여야 하며, 유의수준 1%($\alpha=0.01$) 또는 5%($\alpha=0.05$) 또는 10%($\alpha=0.1$)내에서 의미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가설 1-1 '후생복지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이다'와 가설 1-2 '공원 개소 당 주민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가설 1-3 '사회복지시설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후생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원 1개소 당 주민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의 유입을 더 많이 기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후생환경과 순 인구이동의 관계를 검증한 모든 연구가설이 채택되어 수도권 주거지 이동은 후생환경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환경 요인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이다'는 1%의 유의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2 '지역간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1%의 유의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 주거환경은 주거지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순 이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환경과 관련한 가설 3-1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주민유입은 감소할 것이다'와 가설 3-2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주민유입은 감소할 것이다'는 1%의 유의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어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관심이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설 3-3 '대학진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는 연구가설이 기각되어 기대와는 달리 대학진학률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한 가설 4-1 '공공편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와 가설 4-3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감소할 것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벗어나 연구가설이 기각되었

다. 그러나 가설 4-2 '지역 내 공공기관 당 주민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감소할 것이다'는 5%의 유의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지방재정적 요인과 관련한 가설 5-1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을수록 그 지역으로의 주민유입이 감소할 것이다'는 연구가설이 기각되어 지방세 부담과 인구가동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설 6-1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는 연구가설이 5%의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어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가설 6-2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도 5%의 유의수준에서 연구가설이 채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양호할수록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검증 결과 지방공공서비스와 순 인구가동률과의 관계는 후생환경에서 후생 시설 수(+), 공원 1개소 당 주민 수(-), 사회복지시설 수(-), 주거환경에서 주택보급률(+), 지역 간 접근성(+), 교육환경-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행정서비스 접근성에서 관공서 당 주민 수(-), 지방재정 요인으로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 재정자립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의 요약

지방공공서비스가 수도권 인구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지역의 후생·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공공서비스 접근성, 지방재정적 요인 등이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의 주택환경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측정지표인 주택보급률을 사용하였으며, 인구가동과 정(+)의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환경은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신현곤, 1997; 유경문, 1989)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일 수록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교통의 접근성 또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이 증명되어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이 좋은 지역일수록 인구의 유입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역 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이동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교육을 매우 중시해왔다. 따

라서 주거지 결정에 있어서 교육환경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성진근, 1988; 송명규, 1992 등). 그리고 외국에서도 교육의 질이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다(Jud & Bennett, 1986; Frey, 1980 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수도권 인구의 이동에 교육의 질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셋째, 한국의 지방재정체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처럼 지역 간 조세체도가 일정할 경우, 지역의 후생복지혜택은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수도권 내의 각 자치단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의 수가 서로 다르며, 이러한 시설이 많을수록 이동과의 정(+)의 관계로 나타나 더 많은 후생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복지시설에는 각종 상담소,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기타 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문화시설은 도서관,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국립극장·공연장, 시·구민회관, 각종 기념관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후생복지시설의 개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입노력에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쾌적성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된 사회복지시설은 그 수가 많을수록 순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며, 지역 내 공원 당 주민수가 많은 자치단체 또한 순인구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Tiebout의 인구이동에 관한 가정은 재정적 인구이동을 기초로 한다. 즉 지방정부의 지방세체도가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많은 실증분석에서 검증되었다(Cebula & Belton, 1994 등).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방재정변수는 인구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경문, 1989 등). 본 연구에서도 수도권의 인구이동에는 지방재정변수로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인구이동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획일적인 조세제도 하에서 지방세 부담은 동일한 반면, 부담에 의한 후생혜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 같은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의 검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현실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Tiebout의 가설로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주거지 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의 연구들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변수들은 경제적 요인과 비교하는 수준에서의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개의 공공서비스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서비스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은 지방재정구조를 갖고있는 사회에서는 '재정적 요인보다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더 향유하고자 하는 주거지 이동이 있을 것이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인구이동 요인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수도권 외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로 지역의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후생복지환경, 그리고 관공서 당 주민 수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정부의 지방세체도가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Tiebout의 재정적 인구이동에 관한 가설은 한국의 조세체도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주를 이루었고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지방세 부담액과 인구이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체도가 주거지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인당 사회개발비 지출액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토대로 연구결과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한국은 수도권 지역 과밀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수도권 규제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공공청사 건축규제, 대학신설 규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수도권 과밀현상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도 수도권 집중의 인구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일련의 규제정책들이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의 잠재력과 특성을 위축시켜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1). 따라서 수도권의 잠재력을 극대

화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지방분산정책보다 수도권내에서의 적절한 기능분산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도권 인구이동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주택보급이다. 이는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위한 인근 경기지역의 위성도시 건설정책으로 서울인구가 인접한 위성도시로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인구의 감소와 경기도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위성도시들은 주로 주거기능의 역할만 있을 뿐 다른 기능들(예를 들면, 정치, 행정, 금융, 교육, 문화 등)은 대부분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기능과 인구가 함께 이동하는 실질적인 인구분산의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성도시의 건설과 함께 인구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기능, 공공관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능을 이전시켜 자족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서울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나타난 수도권 인구이동의 또 다른 요인은 교육환경과 후생복지환경이다. 만약 서울 외곽의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후생편익을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복지, 문화 등과 같은 서비스를 위한 일시적인 이동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후생복지환경이 보다 나은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동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나 서울 주변의 자치단체들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서비스시설 등과 같은 주민들의 후생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족적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자체 인구의 유출을 막고 서울로부터의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내부의 기능 분산 및 인구이동에 관한 정책대안들은 수도권을 벗어난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국인구의 약 1/2에 육박할 만큼 과밀·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지방분산정책과 지방도시의 육성을 위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갖고있는 각종 서비스 기능이 지방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로 유입한 인구의 약 34%가 20대로서 가장 많은 반면, 경기도와 인천의 유인인구는 30대가 각각 29.5%, 31.7%로 가장 많다(통계청, 2001).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대학교육 수요, 직업수요, 주택수요 등에 의한 유입이 많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대학교 이상)의 지방분산은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자주권 강화에 의한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 재정정책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재정자주권을 가짐으로써 지방세제도와 복지분야의 세출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집권적 재정제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변수와 인구이동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에서는 인구이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적 구조에 의한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정부에 의한 중앙(수도권 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의 조세 부담과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지방분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재정 및 재정권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주민유입 정책에 요구되는 재정보조를 병행하는 정책대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로서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들의 인구분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방안을 탐색하는데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인구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방공공서비스와 수도권의 주거지 이동현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도권 관리와 분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서비스로 한정함으로써 전체의 이동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광역자치단체와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2차 자료이다. 2차 자료의 특징은 신뢰성이 높은 반면,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측정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1999).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 _____. (200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 경기도. (2001). 「2000년 통계연보」.
- 김남일·최 순. (1998). 인구이동과 지역단위별 농촌인구분포의 변화. 「한국인구학」, 21(1): 42-79.
- 류성호·이성우. (2000). 사회·경제 및 주거환경적 특성이 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5(1): 9-36.
- 박문옥 외. (1990). 환경재와 지방공공재의 불공평한 배분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25(2): 149-168.
- 서울특별시. (2001). 「2000년 통계연보」.
- 성진근. (1988). 지역간 인구이동의 요인과 농촌지역의 환경. 「충북대 농업과학연구보고」, 6(1): 97-115.
- 송명규. (1992). 「지방공공재가 소득계층별 주거지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유경문. (1989).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은우. (1993). 군지역 주민들의 이주의식 조사 분석. 「울산대사회과학논문집」, 6(2): 11-26.
- 인천광역시. (2001). 「2000년 통계연보」.
- 전진석. (1998).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 지역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 281-300.
- 정기원. (1989). 거주지 이동에 관한 모형의 설정-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통합. 「한국인구학회지」, 12(1): 30-41.
- 조일홍. (1992). 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분할론의 유용성과 한계. 「한국행정학보」, 26(3): 353-375.
- 최화식. (2002). 「지방공공서비스가 자치단체간 주민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도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1). 「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인구이동 및 통근통학부문」.
- _____. (2002). 「2001년 인구이동 통계」.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9: 913-918.
- Isard, W. (1975).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Lowry, I.S. (1966). *Migration and Metropolitan Growth: Two Analytical Models*, San Francisco: Chandler Pub.
- Chshing, B.J. (1993). The Effect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on Metropolitan Migration in the U. S. by Income Group, Gender and Family Structure, *Urban Studies*, 30: 325-338.
- Knapp, T.A. and N.E. White. (1992). Migration Decision and Site-Specific Attributes of Public Policy: Microeconomic Evidence from the NLSY, *Review of Regional Studies*, 22: 169-194.
- Herzog, H.W., Jr. and A.M. Schlottman. (1986).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Recent Migran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25: 1-16.
- Fox, W.F., H.W., Jr. Herzog and A. M. Schlottman. (1989). Metropolitan Fiscal Structure and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9(4): 523-536.
- Graves, P.E. (1976). A Reexamination of Migration, Economic Opportun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3: 541-546.
- Greenwood, M.J. (1985).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Academic Press.
- Lee, S. W. and C.C. Roseman. (1997). Independent and Linked Migrants: Determinants of American-American Interstate Migration, 1985- 1990, *Growth and Change*, 28: 309-334.
- Cebula, R.H and W.J. Belton. (1994). Voting with One's Feet: An Empirical Analysis of Public Welfare and Migration of the American Indian, 1985-1990, *Ame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ology*, 53(3): 273-280.
- Jud, G.D. (1984). Public Schools and In-migration In North Carolina Counties, 1975-80.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1-39.
- Jud, G.D. and D.G. Bennett. (1986). Public schools and the Pattern of Intra-urban Residential Mobility. *Land Economics*, 62(4): 362-370.
- Li, M.M. and H.J. Brown. (1980). Micro-neighborhood Externalities and Hedonic Housing Prices. *Land Economics*, 56(2): 125-141.
- Frey, W.H. (1980). Status Selective White Flight and Central City Population Change :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0: 71-90.
- Schachter, J. and P.G. Althaus. (1982). Neighborhood Quality and Climate as Factors in the U.S. Net Migration Patterns, 1974-76.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1: 387-400.